

「2017년 1월 14일 시행」  
제2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인문사회계열 : 선택과목】**

문제책형
<b>A</b>

선택과목 기재란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	

선택과목(5)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

※ 선택과목 기재란은 응시표에 표기된 순서에 맞게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문제지를 받으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지 표지에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답안지의 책형란에 문제지의 책형을 기재·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작 전에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되며, 시험이 시작되면 과목 편철 순서, 파손, 인쇄상태, 매 페이지의 동일책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문제풀이를 하기 바랍니다.

※ 본 시험문제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30페이지입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문제지(전부 또는 일부)는 가져갈 수 없으며, 시험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 【 행정학 】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관리주의                      ② 공공선택이론
- ③ 신공공서비스이론            ④ 주인-대리인이론
- ⑤ 거래비용이론

2.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에 입각한 행정인의 행태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상력을 동원한다.
- ② 타인을 객관적인 관찰 대상으로서의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본다.
- ③ 관료의 분류 방식에 따라 시민들을 특정 범주에 규격화하거나 고정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 ④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상위설화(meta-narratives)'에 대한 비현실적인 근거를 해체하려고 노력한다.
- ⑤ 기존 학문의 영역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학문 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3. 피터스(Guy 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통적정부모형에서 문제의 진단기준은 계층제이다.
- ② 시장모형에서 구조의 개혁방안은 분권화이다.
- ③ 참여정부모형에서 관리의 개혁방안은 가변적 인사관리이다.
- ④ 유연조직모형에서 정책결정의 개혁방안은 협의·협상이다.
- ⑤ 저통제정부모형에서 공익의 기준은 저비용이다.

4. 다음 중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말하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 즉 정부가 공익보다는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수호하는 포획(capture)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 ① 편익과 비용이 각각 소수의 특정 집단들에 집중된 경우
- ② 편익과 비용이 각각 다수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된 경우
- ③ 편익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된 경우
- ④ 편익은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된 경우
- ⑤ 편익과 비용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경우

5.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에서는 모든 가능한 대안들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이 선택된다고 본다.
- ② 점증모형에서는 기존의 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 ③ 관료정치모형에서는 관료들 간의 흥정, 타협, 연합, 대결 등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 ④ 만족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보다는 국민들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모색한다고 본다.
- ⑤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라는 네 가지 흐름이 따로따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한 계기에 임의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6. 정책의제화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 ① 일상화되지 아니한 특수문제의 경우
- ②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은 경우
- ③ 정책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높은 경우
-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 ⑤ 정책담당자 또는 정책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문제의 해결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7.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문제사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종료 후에는 해체하는 조직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막료 조직                      ② 위원회 조직
- ③ 비공식 조직                  ④ 애드호크라시
- ⑤ 테크노크라시

8.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고객중심적 서비스의 요청
- ② 안정적인 조직 환경
- ③ 규칙과 절차의 발달
- ④ 권위주의적 문화
- ⑤ 조직 재정자원의 규모 팽창

9. 공식집단에 대비되는 비공식집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직 목표와 집단 목표의 일치
- ② 집단의 목표나 임무의 명확한 규정
- ③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의 획득 용이
- ④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감 부여
- ⑤ 조직의 공식적 요청에 의해 형성

10. 나카무리(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정책결정자가 집행 과정을 통제하는 유형이다.
- ②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 형성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집행자들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유형이다.
- ③ 협상형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협상 과정을 통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설정되는 유형을 말한다.
- ④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자유재량을 가지고 실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자는 이를 충실하게 시행에 옮겨보는 유형을 말한다.
- ⑤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고 정책결정자로부터 하여금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하는 유형을 말한다.

11. 어떤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정한 자격요건 혹은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부규제의 유형 중 무엇에 속하는가?

- ① 사회규제    ② 진입규제    ③ 가격규제
- ④ 품질규제    ⑤ 퇴거규제

12.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 효과                      ② 자연독과점의 발생
- ③ 공공재의 존재                  ④ 관료제의 역기능
- ⑤ 정보의 불균형

13. 민츠버그(H. Mintzberg)가 분류한 조직 유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순구조(simple structure) : 낮은 분화수준, 높은 집권화수준, 낮은 공식화수준, 높은 융통성
- ② 기계적관료제(machine bureaucracy) : 높은 분화수준, 높은 공식화수준, 높은 경직성
- ③ 전문적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 : 높은 수직적 분화수준, 높은 공식화수준, 높은 분권화 수준
- ④ 할거적구조/ 사업부제 구조(divisional form) : 중간계층이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주된 조정방법은 산출의 표준화
- ⑤ 애드호크라시(adhocracy) : 높은 수평적 분화수준, 유기적 구조, 낮은 공식화수준

14. 다음 중 행정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확립
- ②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
- ③ 음부즈만 제도의 확대 강화
- ④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
- ⑤ 행정정보에 관한 기밀유지 및 보안 강화

15. 다음 중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고르게 반영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제도는?

- ① 고위공무원단      ② 골격입법
- ③ 대표관료제      ④ 책임운영기관
- ⑤ 엽관제

16. <보기>의 설명에 나타난 인지편향(cognitive bias)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 < 보기 > —

누가 구청장인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구청장실에 들어갔는데 여자와 남자가 책상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구청장이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중에서 남자에게만 인사를 하였다.

- ①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
- ② 상동적 태도(stereotyping)
- ③ 후광효과(halo effect)
- ④ 대비효과(contrast effect)
- ⑤ 투사(projection)

17. 국회의 예산심의절차를 순서에 맞게 연결한 것은?

ㄱ. 대통령 시정연설  
 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ㄷ.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  
 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ㅂ.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 조정  
 ㅅ. 부처별 심사  
 ㅇ. 본회의 심의·승인

-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② ㄱ - ㄴ - ㅁ - ㄷ - ㄹ - ㅅ - ㅂ - ㅇ
- ③ ㄱ - ㄷ - ㅁ - ㄹ - ㄴ - ㅅ - ㅂ - ㅇ
- ④ ㄱ - ㄷ - ㄹ - ㄴ - ㅁ - ㅂ - ㅅ - ㅇ
- ⑤ ㄱ - ㄹ - ㄴ - ㅁ - ㄷ - ㅂ - ㅅ - ㅇ

18. 공무원이 일상 행정에서 정보를 관리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정확성 확보
- ② 공공정보의 사적 사용 금지
- ③ 정보의 보안 유지
- ④ 공공정보의 공개
- ⑤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19. 다음의 재화와 서비스 중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낮은 것은?

- ① 국방      ② 택시 이용   ③ 해저광물
- ④ 상하수도   ⑤ 초등교육

20.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치조직권      ② 자치행정권
- ③ 자치사법권      ④ 자치입법권
- ⑤ 자치재정권

21.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이며 관심의 범위는 투입의 규정에 국한된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지향적이며 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된다.
-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며 다른 관리기능들과 예산기능을 통합시킨 총체적 관리체제이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직성 경비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 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는 예산규모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22. 점증주의 정책결정의 장단점을 합리주의 정책결정과 비교하여 서술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안의 탐색과 분석 비용 증가
- ② 참여와 이익표출의 촉진
- ③ 갈등소지의 축소와 높은 예측가능성
- ④ 정책결정과정 참여세력의 지지획득 용이
- ⑤ 발전과 개혁에 대한 장애

23. 예산을 편성절차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제출 후 국회의결 전에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은?

- ① 수정예산   ② 준예산      ③ 가예산
- ④ 잠정예산   ⑤ 추가경정예산

24.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채용한다.
- ③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④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의 자율성은 있으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운영의 독립성은 있으나, 예산운영의 자율성은 없다.

25.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의 근거는 전통이나 카리스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기초한 합법성에서 나온다.
- ② 관료제는 법적 권위에 기초한 조직형태로, 관료는 법 규정에 있는 대로 명령에 복종한다.
- ③ 직무의 수행은 전문성이 낮은 일반행정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 다방면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 ④ 관료제에서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의하여 행해지며 조직의 재산과 사유 재산은 구분된다.
- ⑤ 관료는 부업으로서 행할 수 있는 성질의 직업이 아니라 전임적인 성격의 직업이다.

## 【 민법총칙 】

1.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되기 위하여 일반적 권리남용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② 부재자는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한다.
- ③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산 처분권까지 위임하였다면 그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 ④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기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면 부재자와 관계 없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3.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온천권
- ② 분묘기지권
- ③ 동산의 양도담보
- ④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⑤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

4. 태아 甲의 아버지 乙이 자동차 운전자 丙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출생한 때에는 乙의 중상으로 인해 자신이 겪을 고통에 대하여 丙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를 하여야 乙의 권리능력이 상실된다.
- ③ 甲이 아직 태아인 동안에 乙이 사망한 경우,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甲은 출생 전에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 ④ 甲이 아직 태아인 동안에 乙이 사망한 경우,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甲은 출생 전에는 상속받을 수 없다.
- ⑤ 甲이 사산(死産)된 경우에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의 대립과 상관없이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②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청구가 있으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 ④ 만 17세인 甲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하여 父로부터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쇼핑몰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6.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표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④ 소송행위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7.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④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호텔 객실에 설치된 냉장고, TV 등은 호텔의 종물이 아니다.
- ② 주물·종물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 ③ 주물의 소유자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④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별개로 권리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
-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으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9.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실종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실종자가 생존하였다는 반증이 있으면, 실종선고의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실종의 원인인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 ②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③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 ④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 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11.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1년 이상 장기의 차입계약
- ㄴ.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약정
- ㄷ.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체결된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약정
- ㄹ.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 ㅁ.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12.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甲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乙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 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④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甲과 乙은 매매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1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② 정지조건부 채권은 정지조건이 성취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의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 불확정 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4. 甲 법인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乙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甲 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乙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포괄적 수임인 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 법인에 효력이 미친다.
- ㄴ. 만약 乙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丙은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乙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제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므로, 丙은 더 이상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게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

③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으나 그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였다면, 더 이상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6. 채무초과상태의 공무원 甲이 채권자 乙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A빌딩에 대해 친구인 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옮긴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丁명의로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 乙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가장매매의 무효를 丁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甲이 丁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17.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채무자
- ② 甲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허위인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선의로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 ③ 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 ④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18.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②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1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②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③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0. 甲이 만 18세인 대학생 乙에게 X아파트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이 분양하는 X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丙은 甲에 대하여 X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의 법정대리인은 X아파트 분양계약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丙이 X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만일 乙이 무권대리인이었고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일 X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乙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 ②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확정된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체결시 토지 일정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다.

22.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에게 촉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 ⑤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乙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2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표의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행위의 조건이 될 수 있다.
-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 기한에 대해서는 기한도래 후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24.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 ②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일람표의 총람 공고기간의 초일'
- ③ 구 국회의원선거법상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 ④ 연령의 계산
- 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

25.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 ③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무를 면하더라도 기산일 이후 시효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⑤ 소멸시효의 완성 후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 이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 【 형사소송법 】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유죄판결에는 형선고, 선고유예, 형면제의 판결이 포함된다.
- ③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이 '사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피의자에게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 등의 우려가 없었고, 수사검사도 피의자에 대한 계구(戒具)의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호교도관이 이를 거절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더라도 진술거부권 보장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해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이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최초 자백 후 40여일이 지난 뒤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법정진술은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 ⑤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3.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었다면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 ②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일반국민의 정당한 관심대상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
- ③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처리 하였다면,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피교사자에게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행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피의자가 특정범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가 있고 사후에 실제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차량의 운전자는 준현행범인으로 인정된다.

5.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이다.

③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⑤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6. 체포 또는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반 사인의 경우에도 현행범체포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압수물의 경우라도 추후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기간도 산입된다.

④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⑤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제시가 원칙이지만,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 ③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미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 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는 제한이 있다.

②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9. 공소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한 경우 그 사건을 재기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③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⑤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며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0. 다음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
- ② 강간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 ③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 ④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절도죄와 상해죄를 인정한 경우
- ⑤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경우

11.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전문심리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전문심리위원회는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회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12.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불허가 결정 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허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까지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3. 증인 및 증언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유아의 증언능력의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⑤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그가 조사과정에서의 실험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다.

1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은 물론이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 ②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진술은 하여도 무방하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도 간이공판절차 개시여부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 제한은 적용된다.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으나 그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긴급체포기간 중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③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와 이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③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 ④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 ⑤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배심원의 유무죄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17.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송치 후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②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그 자술서가 영상녹화물에 의해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④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기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 없거나, 간인이 없으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18.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진술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지 아니하는 등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 ②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 ③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 ④ 증인으로 소환을 받았으나 증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 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19. 당사자의 증거동의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서류의 사본이나 사진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
- ② 증거동의를 구두변론의 종결시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⑤ 증거동의를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는 물론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 동의를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20.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자백과 주된 보강증거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⑤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1. 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할 수 없다.
- ②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 ③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상소를 취하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있다.
- ⑤ 보통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할 수 있다.

22. 상고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 ②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여러 개 선고되고 이를 모두 합산한 형기가 10년 이상이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
- ④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⑤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23.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고, 공소기각의 결정과 상소기각의 결정은 비록 결정이기는 하지만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소년의 연령을 오인하여 정기형을 선고하거나 성년의 연령을 오인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하여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 ③ 피고인에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원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되고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 ⑤ 피고인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실제판결을 하였다면 법령위반에 해당되고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

24.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 ②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약식명령의 청구에는 약식명령청구서의 부분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
-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제기

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 제기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가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 ⑤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도 있다.

25.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진술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아도 진술의 임의성 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 ⑤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그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 【 경제학 】

1. 갑은 매달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일정 금액만큼만 주유한다. 갑의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 ① 0                    ② 0 초과 1 미만  
 ③ 1                    ④ 1 초과 2 미만  
 ⑤ 무한대

2. A회사는 보통우유와 저지방우유를 생산 판매한다. 보통우유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2,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2, 보통우유의 저지방우유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0.4이다. A회사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통우유의 가격을 5% 인상하기로 하였다. 보통우유의 수요가 가격 인상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A회사는 저지방우유의 가격을 몇 % 인상해야 하는가?

- ① 3%   ② 5%   ③ 8%   ④ 10%   ⑤ 15%

3. 정부의 가격규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은 항상 증가한다.  
 ㄴ. 완전경쟁 요소시장의 노동수요곡선이 우하향할 때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실업을 증가시키고 전체 노동자 소득에 증가를 가져온다.  
 ㄷ. 최고가격제의 시행은 초과수요의 발생으로 암시장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4. 종량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세금에 대한 소비자의 조세부담은 작아진다.  
 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세금에 대한 소비자의 조세부담은 작아진다.  
 ㄷ.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세금은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ㄹ.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은 생산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어떤 투자자가 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성공하면 0.5의 확률로 225만원을 받고, 사업이 실패하면 0.5의 확률로 81만원을 받게 된다. 투자자의 효용함수는  $U(Y) = 10Y^{0.5}$  이고 여기서  $Y$ 는 소득이다. 이 투자 기회에 대한 확실성등가와 위험프리미엄은 각각 얼마인가?

	<u>확실성등가</u>	<u>위험프리미엄</u>
①	100만원	9만원
②	110만원	9만원
③	121만원	9만원
④	144만원	9만원
⑤	153만원	9만원

6. 다음 중 총고정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총가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② 총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총이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⑤ 총고정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7. 생산함수가  $Q=5KL^2$ 로 주어져 있는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 $MP_K$ )은 얼마인가?

- ①  $5L^2$     ②  $10L^2$     ③  $5K$     ④  $10K$     ⑤  $5KL$

8.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의 비용함수가  $C=150Q$ 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이 시장에서 장기균형가격은 얼마인가?

- ① 50            ② 100            ③ 150  
④ 200            ⑤ 300

9.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 수준으로 생산하고 독점 가격을 설정한다. 독점 기업 A의 한계수입이 1,000원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일 때, 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격은 얼마인가?

- ① 1,000원    ② 2,000원    ③ 3,000원  
④ 4,000원    ⑤ 5,000원

10. 판매자는 제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나 구매자는 그렇지 않아서 거래당사자 간 제품에 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 ① 전반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아진다.  
② 단지 정보의 차이로 인하여서는 시장에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시장 참여자들의 후생이 증진된다.  
④ 고급제품의 판매가 저급제품의 판매보다 많아져 고급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  
⑤ 저급제품의 판매가 고급제품의 판매보다 많아져 저급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

11. 두 기업 A와 B가 참여하고 있는 복점시장의 수요곡선은  $P=120-Q$ 이고, 두 기업 모두 한계비용을 0으로 가정한다. 만약 두 기업이 완전한 담합을 유지할 수 있을 때, B기업의 생산량이 30이라면 A기업의 생산량은 얼마인가? (단, 두 기업 모두 추종자로 행동한다)

- ① 15            ② 30            ③ 60  
④ 90            ⑤ 120

12. 모든 물가수준과 임금이 신축적이어서 물가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치가 일치하는 충분히 긴 기간을 장기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화폐공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실질이자율    실질 국민소득    물가수준

- |   |    |    |    |
|---|----|----|----|
| ① | 상승 | 증가 | 불변 |
| ② | 상승 | 증가 | 상승 |
| ③ | 하락 | 감소 | 상승 |
| ④ | 불변 | 불변 | 상승 |
| ⑤ | 불변 | 불변 | 불변 |

13. 여가와 노동시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예산선은 소득을 수직축<단위: 원>, 여가를 수평축<단위: 시간>으로 한 평면상에 그려진다.)

- ㄱ.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률이다.  
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소비를 줄이고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대체효과라 한다.  
ㄷ.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시간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므로, 예산선은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ㄹ. 일반적으로 여가는 열등재로 간주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4. 사회적 후생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외제차에 대한 높은 소비세의 부과는 조세의 소비자 부담을 크게 하여 소비억제효과를 가져온다.
- 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지는 대부분의 재화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지만, 줄어든 만큼 정부의 조세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없다.
- ㄷ.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적이고 시장실패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의 자원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5. 다음 중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대변항목에 속하는 것은?

- ① 정부예금            ② 대정부여신  
 ③ 대예금은행여신    ④ 외화자산  
 ⑤ 유가증권

16. A보험회사는 소정의 건강진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고, 특정 나이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여 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 이것은 다음의 역선택 해결방안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① 효율임금    ② 선별            ③ 평판  
 ④ 신용할당    ⑤ 표준화

17.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확장적 금융정책을 시행하여 통화량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과급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이자율 하락            ② 수입가격 상승  
 ③ 원화가치 하락        ④ 수출 증가  
 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

18. 게임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내쉬균형은 게임에서 경기자가 순수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존재한다.
- ㄴ. 내쉬균형은 항상 우월전략균형이지만 우월 전략균형이 반드시 내쉬균형은 아니다.
- ㄷ.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게임은 우월전략균형을 가진다.
- ㄹ. 순차게임에서의 균형은 내쉬조건 뿐만 아니라 신빙성 조건도 동시에 충족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통화량이 5조원, 명목 국내총생산이 100조원, 실질 국내총생산이 50조원인 어떤 국가는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고 실질 국내총생산이 매년 4% 증가한다.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면 올해를 기준으로 한 내년의 물가수준과 명목 국내총생산은 얼마인가?

	물가수준	명목 국내총생산
①	4% 상승	104조원
②	4% 하락	100조원
③	4% 하락	96조원
④	불 변	96조원
⑤	불 변	100조원

20. 다음 중 광의통화(M2)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현금통화  
 ②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③ 양도성 예금증서  
 ④ 환매조건부 채권  
 ⑤ 국채

21. 불황일 때 이자율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완전고용 균형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 ① 재정정책은 긴축시키고, 금융정책은 확대한다.
- ② 재정정책은 확대하고, 금융정책은 긴축시킨다.
- ③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모두 확대시킨다.
- ④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모두 긴축시킨다.
- ⑤ 재정정책은 긴축시키고, 금융정책은 시행하지 않는다.

22. 다음 중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 수감자와 군복무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 ②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 ③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④ 마찰적 실업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15세 이상 인구 중 가정주부, 학생, 노약자 그리고 실망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23. 절대적 구매력평가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실질환율은 얼마인가?

- ① -1                      ② 0                      ③ 1
- ④ +∞                      ⑤ -∞

24. 화폐수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예비적 화폐수요란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는 것으로 소득에 대한 증가함수이다.
- ㄴ. 거래적 화폐수요란 예상 가능하거나 일상적인 지출을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 것으로 소득에 대한 증가함수이다.
- ㄷ. 투기적 화폐수요란 수익성 금융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면서 일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자율에 대한 감소함수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 폐쇄경제에서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Y)이 80조원, 조세가 15조원, 민간저축이 5조원, 정부저축이 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폐쇄경제에서 소비는 얼마인가?

- ① 7조원                ② 13조원                ③ 58조원
- ④ 60조원                ⑤ 73조원

## 【 소방학개론 】

1. 다음의 소방에 관한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④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A 광역시 소방본부장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화재조사 활동 결과 다음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A 광역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망자가 5명 발생한 화재
- ㄴ. 이재민이 100인 발생한 화재
- ㄷ. 재산피해액이 50억원 발생한 화재
- ㄹ. 사상자가 10인 발생한 화재
- ㅁ. 학교화재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3. 다음의 소방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조직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조직이다.

- ② 도시의 인구집중화 현상, 건물의 고층화와 대형화, 지하생활공간의 확대, 가스·위험물 시설 및 사용량의 증가, 불특정다수가 운집하는 백화점이나 영화관의 증가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방의 역할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 ③ 우리나라의 소방은 1948년 정부수립시부터 시·도 광역자치소방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 ④ 소방행정은 위급한 재난에 대응하는 위기관리(emergency management)의 성격을 지니므로 일반 행정과는 다소 다른 특징도 갖는다.
- ⑤ 오늘날 소방행정은 소방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로 인해 전문적인 기술과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과학적 지식체계를 필요로 한다.

4. 의용소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 ②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 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자격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 ④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⑤ 의용소방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5.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⑤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 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대중정보계획      ② 재난통신계획
- ③ 긴급오염통제계획    ④ 위험지역설정계획
- ⑤ 피해상황분석계획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며, 단장은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②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 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소방서, 대한적십자사는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8. 다음은 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 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 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은 특별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

9.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발은 밀폐공간에서 급격한 압력상승으로 에너지가 외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파열, 후폭풍, 폭발음을 동반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②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 점화원, 폭발범위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③ 물리적 폭발은 물질의 상태(기체, 액체, 고체)가 변하거나 온도, 압력 등의 조건의 변화에 의한 폭발이다.
- ④ 화학적 폭발은 화학반응의 결과로 압력이 발생하여 유발되는 폭발이다.
- ⑤ 폭발의 원인에 따른 폭발의 분류 중 가스폭발, 분무폭발, 분진폭발은 물리적 폭발에 속한다.

10. 다음 중 가연성 물질들의 인화점을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휘발유 < 벤젠 < 톨루엔 < 등유 < 글리세린
- ② 벤젠 < 휘발유 < 톨루엔 < 글리세린 < 등유
- ③ 휘발유 < 벤젠 < 등유 < 톨루엔 < 글리세린
- ④ 벤젠 < 톨루엔 < 휘발유 < 등유 < 글리세린
- ⑤ 휘발유 < 벤젠 < 톨루엔 < 글리세린 < 등유

11.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액화가스탱크 등에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열에 의하여 액체가 비등하면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용기가 파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 ② BLEVE 현상은 비등하는 액체가 팽창하여 용기가 파손되면서 분출하는 화학적 폭발 현상이며, 이때 분출되는 가스가 가연성이면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물리적인 폭발이 이어질 수 있다.

③ 탱크가 계속 가열되면 용기 강도는 저하되고 내부 압력은 상승하여 어느 시점이 되면 저장탱크의 실제압력을 초과하게 되고 탱크가 파괴되어 급격한 폭발현상을 일으킨다.

④ BLEVE 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저장용기의 재질, 주위의 온도와 압력상태 등이 있다.

⑤ 냉각살수장치 설치, 용기 내압강도 유지, 감압시스템 설치 등이 BLEVE 현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

12. 가연물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발생하며, 흡입하면 헤모글로빈(Hb)과 결합하여 몸속의 산소운반을 방해하여 질식을 유발시키는 무색, 무취의 연소가스는?

- ① 일산화탄소(CO)    ② 이산화탄소(CO<sub>2</sub>)
- ③ 이산화질소(NO<sub>2</sub>)    ④ 암모니아(NH<sub>3</sub>)
- ⑤ 아황산가스(SO<sub>2</sub>)

13. 연소점(fire poi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연물에 점화원을 제거한 후에도 지속적인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온도
- ②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착화가 가능한 가연물질의 최저온도
- ③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점화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자체가 스스로 착화가 되는 최저온도
- ④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쓰이며, 위험물질관리법에서 석유류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도 사용
- ⑤ 고체의 연소점은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액체는 인화점과 연소점이 같음

14. 화재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의 분류는 가연물의 종류와 성상, 대상물의 종류 등에 따라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스화재 등으로 구분된다.
- ② 일반화재는 산소와 친화력이 강한 물질에 의한 화재로 연소 후 재를 남길 수 있는 대상물 화재를 말한다.
- ③ 유류화재는 화재 성장속도가 일반화재보다 느리며, 생성된 연기는 백색으로 연소 후에는 재를 남긴다.
- ④ 전기화재는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하며 원인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화재로 주로 누전, 과전류, 합선 혹은 단락 등의 발화가 그 원인이다.
- ⑤ 금속화재는 물과 반응하여 수소(H<sub>2</sub>)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며, 물이나 물을 포함한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15. 다음 건물화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 초기단계에서는 가연물이 열분해되어 가연성가스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 ② 화재 성장기단계에서는 실내에 있는 내장재에 착화하여 롤오버 등이 발생하며 개구부에 진한 흑색연기가 강하게 분출한다.
- ③ 최성기 이후에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하며, 이후 실내에 있는 가연물 또는 내장재가 격렬하게 연소되는 단계로서 실내온도가 최고온도에 이르는 시기이다.

④ 목조건축물은 건축물 자체에 개구부가 많아 공기의 유통이 원활하여 격심한 연소현상을 나타내며, 고온단기형이다.

⑤ 내화건축물은 목조건축물에 비해 공기 유통조건이 일정하며 화재진행시간도 길고, 저온장기형이다.

16. 플래시오버(Flash Over)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플래시오버 현상은 점화원의 위치와 크기, 가연물의 양과 성질, 개구부의 크기, 실내 마감재 등에 영향을 받는다.
- ② 열전도율이 작은 내장재일수록 플래시오버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③ 플래시오버 현상은 건축물 실내화재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 ④ 산소가 다량으로 유입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천장재보다 벽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개구부의 크기가 작을수록 플래시오버 현상을 촉진시킨다.
- ⑤ 천장부근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어느 시기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17. 소화약제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소의 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거 또는 차단할 수 있을 것
- ② 가격이 고가일 것
- ③ 인체에 독성이 없을 것
- ④ 환경에 대한 오염이 적을 것
- ⑤ 저장에 있어 변질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성이 있을 것

18. 가스화재 시 밸브를 차단시켜 가스공급을 중단시키는 소화방법의 소화원리로 옳은 것은?

- ① 냉각소화                      ② 질식소화
- ③ 제거소화                      ④ 억제소화
- ⑤ 희석소화

19. 위험물의 유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류 위험물은 인화성액체로 인화위험이 높고, 비교적 발화점이 낮으며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무겁다.
- ②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환원성 물질이다.
- ③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급수성 물질로 자연발화성 물질 및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다.
- ④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외부로부터 산소의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 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불연성이지만 산화성이 커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20. 유류저장탱크 속의 물이 점성을 가진 뜨거운 기름의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기름이 넘쳐흐르는 현상은?

- ① 슬롭오버(Slop over)
- ② 후로스오버(Froth over)
- ③ 오일오버(Oil over)
- ④ 보일오버(Boil over)
- ⑤ 플래시오버(Flash over)

21. 다음 중 화재원인조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 ② 연소상황 조사
- ③ 피난상황 조사
- ④ 인명피해 조사
- ⑤ 소방시설 등 조사

22. 물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이 소화약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구입하기 손쉽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 ② 물의 입자크기가 크게 되면 표면적이 증가해서 열을 흡수하여 기화가 용이하게 되므로 입경이 클수록 냉각효과가 크다.
- ③ 소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발률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는 물의 입자를 분무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④ 물은 A급화재(일반화재)에서는 우수한 소화능력이 발휘되나, B급화재(유류화재)에서는 오히려 화재가 확대될 수 있고, C급화재(전기화재)에서는 소화가 가능하지만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⑤ 물 소화약제를 무상수주 하게 되면 냉각효과 뿐만 아니라 수증기의 급격한 팽창에 의한 산소농도를 감소시켜 질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3. 다음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강화액소화설비
- ③ 포소화설비                      ④ 분말소화설비
- 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24.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화설비란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다.
- ② 경보설비란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있다.
- ③ 피난설비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있다.
- ④ 소화용수설비란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있다.
- ⑤ 소화활동설비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이 있다.

2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무엇인가?

주로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로서 유수검지장치 1차측까지 배관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상태로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

-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②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 ③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④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 수고하셨습니다.